

#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정치: 미-중 관계의 전개와 미국의 '선택'

崔 晉 宇

- |                           |                                    |
|---------------------------|------------------------------------|
| I. 서론                     | Ⅲ. 국제정치 이론과 미-중 관계                 |
| Ⅱ. 이론적 쟁점: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정치 | Ⅳ. 미국의 선택: '출구(exit)와 '목소리'(voice) |
| A. 현실주의                   |                                    |
| B. 자유주의/구성주의              | V. 결론: 미-중 관계의 전망과 한국 외교           |

## 한글초록

미국의 논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의 핵심에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수반하는 국제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경계 의식이 확산되는 한편,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대(對) 중국 경제관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도전을 경계하여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축소 내지는 단절을 추구할 것인가?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보았을 때, 미국은 미래 중국의 패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와 경계를 늦추지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고려한다면, 현 시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나라를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주제어 : 미-중 관계, 경제적 상호의존, 현실주의, 자유주의, '출구'와 '목소리', 한국외교정책

## I. 서론

20세기 후반, 국제정치의 지평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냉전의 종식에 따른 양극체

「中蘇研究」, 통권 112호 2006/2007 겨울

제의 붕괴와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1990년대 미국이 성취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적 우위는 미국과 여타 국가들과의 힘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함으로써 국제정치질서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힘의 관계에 있어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변화의 결과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단극체제(Unipolarity)의 형성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국제정치질서는 베스트팔렌 체제의 성립 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제정치질서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浮上)이다. 중국은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사망 이후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꾸준히 개방정책을 추구하여, 시장 경제 논리의 확산을 요체로 하는 세계화의 물결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오랜 기간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낙후성을 탈피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아울러 포괄적인 힘의 팽창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탈냉전 시대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잠재적(潛在的) 또는 현재적(顯在的) 도전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출 산업의 고속 성장에 따른 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의 증가, 막대한 무역 흑자가 가져다 준 천문학적 액수의 달러 표시 외환과 미국 국채 보유고,<sup>1)</sup> 경제발전에 힘입은 군사력 증강,<sup>2)</sup>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매력 외교 공세'(charm offensive),<sup>3)</sup> 유럽,

1)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의 증가 추이와 이에 대한 미국 내의 우려에 대해서는 Patrice C. McMahon and Andrew Wedeman, "Introduction." In David P. Forsythe, Patrice C. McMahon, and Andrew Wedeman, eds. *American Foreign Policy in a Globalized World* (New York: Routledge, 2006), pp. 15-18 참조.

2)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본격화된 것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의 일로써, 천안문 사건이라는 위기로부터 중국 공산 체제를 구한 것이 군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군비 증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석이 있다. 물론 이외에도 중국의 군비 증강은 통상적인 군 현대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나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등 잠재적인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 또한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Arthur Waldron, "The Rise of China: Military and Political Implic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1, 2005, p. 721 참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성장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주요 국가간의 힘의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중국의 부상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의 패권 구도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중 관계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으로는 Ted Galen Carpenter, *America's Coming War with China: A Collision Course over Taiwa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참조.

남미 등에 대한 외교 다변화 노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더불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및 자연 자원 수요 증대 또한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논자들 사이에는 '중국 위협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논의의 핵심에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수반하는 국제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경계론이 자리하고 있다. 그 파급효과란 곧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글로벌 수준과 동아시아 지역 수준 모두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경계 의식이 확산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대(對) 중국 경제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가히 '광속'이라 할 만하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 개방 조치에 힘입어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연평균 10%에 근접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sup>4)</sup> 1980년대 초 국제경제의 변방에서 21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구매력 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한 국민총생산이 세계 제 2위의 규모에 달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sup>5)</sup>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대외 교역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 미국과의 경제 교류 또한 중국의 시장개혁 조치가 시행된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왔다. 1978년 개혁 조치 시행 당시 10억불에 불과하던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2000년에 이르러서는 1,200억불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 와서는 그 두 배를 넘는 2,850억불에 이르게 된다.<sup>6)</sup>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유입되는 투자 자본의 규모도 급속도

3) 중국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이 지역에서의 현상 유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분석으로는 Dana Dillon and John J. Tkacik, Jr., "China's Quest for Asia," *Policy Review*, no. 134, 2005/2006; Elizabeth Economy, "China's Rise in Southeast Asi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4, no. 44, 2005; Jean A. Garrison, "China's Prudent Cultivation of "Soft" Power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in East Asia,"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32, issue 1 참조.

4) US-China Business Council, "PRC Economic Statistics," <http://www.uschina.org/statistics/economy.html> (검색일자: 2006. 8. 3).

5) 2003년 현재 중국의 경제규모는 GNP 기준으로 세계 7위이지만, 이를 PPP로 환산했을 때는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haun Breslin, "Power and Production: Rethinking China's Global Economic Rol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1, 2005, p. 727.

6) US-China Business Council, "PRC Economic Statistics," <http://www.uschina.org/statistics/>

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3억 5천 4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2000년도에는 95억 8천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sup>7)</sup> 더욱이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2001년)한 만큼, 미국과 중국의 상업적 교류의 밀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양국의 상호의존의 심화는 과연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양국 간의 친선 우호 관계가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양국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인가? 혹은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변화와 정치적 협력/경쟁 관계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것은 외교정책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가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관계를 촉진시킨다면 상호의존의 심화는 외교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지만, 양국 간의 경제 교류가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하거나 양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더 크다면 경제 교류의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경제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는 인식 하에, 중국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중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한 당사자로서의 미국이 갖는 인식과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 미-중 양자관계에 있어 특히 미국에 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미-중 관계의 양상이 대체로 미국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비해 국력의 수준이 현저히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주도로 구성된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국제정치 전반은 물론이거니와 미-중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는 '미국의 주도'와 '중국의 반응'이 반복되는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 관계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띠 것인가는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기로 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미국이 택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과연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economy.html](#) (검색일자: 2006. 8. 3).

7)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2005, p. 13.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경계하여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축소 내지는 단절을 추구할 것인지를 진단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두어진다. 본 연구의 결론을 미리 밝히자면, 현 상황에서 미국은 미래 중국의 패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II장에서는 우선 일반론적 수준에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 갈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안의 이론적 근거로써 현실주의, 자유주의/구성주의의 관점에서의 제기하는 주장을 정리해본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에 대해 이들 각 이론의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을 연역적으로 추론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미-중 관계의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IV장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선택의 범위를 '출구'와 '목소리'의 개념으로 압축하였을 때,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책은 자유주의/구성주의의 논리와 일치하는 '목소리'의 옵션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 V장 결론에서는, 비록 미국이 적어도 당분간은 '목소리' 옵션을 택하는 입장을 취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출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실주의적 인식 또한 갖고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이러한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고려할 때 현 시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나라를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임을 지적한다.

## II. 이론적 쟁점: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정치

경제적 교류의 증가가 정치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연구 일반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쟁점의 하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무정부상태로 비유되는 국제정치체제의 안정과 국가 간의 평화를 증진시킬 것인가 아

다면 국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촉매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은 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이 정치적 갈등의 방지책 또는 평화를 위한 처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것이다.<sup>8)</sup>

국제정치경제의 중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한 이 이슈는 냉전이 그 절정기를 지나 이른바 데탕트의 시대가 도래한 이래, 알타체제를 구성했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참여한 군사적 대립이 완화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제정치에 있어 고위정치(high politics)로 일컬어지던 안보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되고, 경제문제를 비롯한 소위 저위정치(low politics)의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냉전의 현실 속에서 사실상 국제정치현상의 향배를 가늠할 것은 군사안보문제였다.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며, 국가 간의 경제적 쟁점은 상당부분 안보논리에 입각해 처리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냉전의 절정기는 안보문제가 경제문제를 압도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냉전의 고삐가 늦추어지면서 안보중심의 국제관계에 점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 안보적 이유로 경제적 갈등을 봉합해오던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쟁점을 둘러싼 이견과 대립이 표면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의 심화는 국가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접촉빈도의 증가에 따른 갈등 발생의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기도 하다.

경제문제가 국제정치적 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된 데는 냉전의 종식 이외에도 운송 및 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운송 수단의 발달은 물류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인적 교류와 국가 간 교역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정보화의 진전은 정보의 교환과 자본의 이동 속도를 현저히 단축시킴으로써 경제적 행위의 외연을 국경 너머로 급속히 확대시키게 된 것이다. 국가 간의 경

8) 여기에서 서술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은 본인의 다른 연구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는 것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옮긴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문제의식을 미-중 관계와 한중관계를 분석하는데 적용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최진우, "경제적 상호의존의 국제정치적 효과," 한홍렬 편, 『한반도와 동북아: 갈등과 협력의 정치경제』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pp. 1-12, 참조.

제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적 쟁점이 부각되고, 이것이 국가 간 교섭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경제적 교류의 급속한 양적 확대, 경제적 문제의 국제정치적 쟁점으로서의 부각, 그리고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오늘날의 추세 속에서 경제적 교류의 증가가 수반하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국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인가? 달리 표현하자면,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struggle for wealth)과, 그리고 국가의 자율성과 군사적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struggle for power) 각각의 집합적 결과는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적 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정부상태 속에서 행위하는 국가들이 처한 안보딜레마의 문제를 해소하는가? 아니면 국가들에 의한 경제적 부의 추구는 국가들 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기존의 이론적 입장들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냉전시대 국제정치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군림해온 현실주의적 관점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실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자유주의 및 구성주의 시각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A. 현실주의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가 간의 갈등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이 두 가지 현상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중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견해는 주로 통계분석에 입각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이론적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sup>9)</sup>

9) 경제적 상호의존의 '평화 효과'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연구로는 Katherine Barbieri, *The Liberal Illusion: Does Trade Promote Pea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Cullen F. Goenner, "Uncertainty of the Liberal Peace," *Journal of Peace*

현실주의 계열의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갈등 유발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견해의 고전적 표현은 역시 '상대적 이득'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실주의 관점에 따르면 경제적 상호의존의 결과로 국가들은 절대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기본적으로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 체제에서는 국가들은 서로를 잠재적인 안보 위협의 원천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의 결과로 생성되는 혜택의 배분을 놓고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 problem)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 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국가들 간의 교역은 리카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역에 참여하는 국가들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경제적 혜택의 분배가 모든 국가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sup>10)</sup> 만일 교역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면, 교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의 힘의 관계에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혜택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기존의 힘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현실주의 관점에 따르면 힘의 구도에 있어서의 변화는 국가들 간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켜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의 증대는 국가 간 갈등의 가능성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견해의 변형으로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국가 간 교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의 구체적 예를 들자면,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서 비롯되는 물품 및 기술의 교류는 국가 간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상호의존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가 독자적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기

*Research*, vol. 41, no. 5, 2004, pp. 589-603; Hyung Min Kim and David L. Rousseau, "The Classical Liberals Were Half Right (or Half Wrong): New Tests of the 'Liberal Peace', 1960-88,"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2, no. 5, 2005, pp. 523-543 등 참조.

10) 경제적 혜택의 배분의 문제와 '상대적 이득'의 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민감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의 연구로는 Joseph M.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pp. 485-508; Stephen Krasner,



술과 장비를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획득하여 경제발전과 군비증강에 활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에 변화가 초래될 것이며, 변화된 힘의 관계는 기존의 국제질서를 타파하려는 에너지로 변환될 것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힘의 분포에 변화가 생기면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국가가 생성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현상 타파 세력과 현상 유지 세력 간의 갈등 및 긴장관계가 증폭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정치적 협력관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로는 “국가들은 타국가와의 교류 및 교역으로 인해 타국가에 대해 의존적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11)</sup>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자율성의 희석이 정치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국가가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하는 특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생산성은 현저히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특화는 타국가와의 분업관계에 놓여짐을 의미하며, 이는 곧 타국과 상호의존관계에 돌입하게 됨을 뜻한다. 이러한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는 곧 국가들의 타국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화된 산업 이외의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용역은 수입해야 하며, 특화된 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화는 국가의 교역 규모를 크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되지만, 국가의 교역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국가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국가 간의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상호의존의 심화로 인해 타국의 자원, 상품, 시장에 의존적이 된 국가는 그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러한 동기는 결국 의존성을 낮추거나, 아니면 의존의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현실화되었던 것이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한 식민지 개척이었던 것이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타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자급자족적인 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던 것이다.<sup>12)</sup> 결국 신현실주의의 입장에서

11)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p. 106.

보면 상호의존의 심화는 오히려 국가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 B. 자유주의/구성주의

반면 자유주의와 구성주의 시각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국가 간 갈등의 심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우선 무정부상태의 속성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불변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들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리적 이유에서이건 아니면 성찰적 과정(reflective process)을 통해서이건, 국가들은 서로를 생존을 위한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후생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지하는 상태로 변환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른바 '성숙한 무정부상태' 하에서는 폭력적 수단의 선택을 상대 국가에 대한 가용한 외교정책 행위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신에 따른 갈등의 증폭 효과(escalation)의 가능성도 매우 낮다.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국가들 간의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충돌과 마찰은 불가피하겠지만, 그것이 국가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제적 교류의 증가를 국가 간 갈등의 원천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들 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만일 국가들이 서로를 '잠재적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국가들 간의 관계에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예측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국가 간 분업에 따른 특화(specialization)가 수반하는 위험성, 즉 '취약성'(vulnerability)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상대적 이득'의 문제와 '안보 딜레마'의 문제 또한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절대적 이득'의 증가가 갖는 매력으로 극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간 분업의 진행으로 나타나는 상호의존의 심화는 국가들 간의 갈등 억제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 간 분업이 진행될 경우, 특화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한편, 전쟁 등의 사유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단절되

12) Ibid.

있을 때에 감수해야 할 피해의 크기가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즉 상호의존이 심화될수록 갈등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국가들의 갈등의 방지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경주의 동기가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탈냉전 이후의 상황에서는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가 국가 간 갈등의 악화를 제어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과거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가 군사안보문제였을 때에는 국가의 외교정책결정에 관련된 많은 사안들이 보안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유리된 공간에서 다루어져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외교정책이나 국제정치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다지 없었다. 더욱이 국제정치의 문제와 시민들의 일상사와의 연결고리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시민들이 자신들의 개인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어려운 국제정치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노릇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국가 외교정책의 사안이 경제문제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투자와 교역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시민 개개인 또는 특정 영역의 이익집단들의 지대한 관심거리가 된다. 자신들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무역협상의 타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환율조정 메커니즘의 구축, 투자협정의 체결 등은 국가경제의 향배와, 나아가서는 개인의 고용 및 임금 수준 등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는가에 따라 개별 국가 내의 경제 행위자들에 대한 분배적 파급효과가 달라지므로, 그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과 집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경제문제가 국제정치의 장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는 현상은 국제정치의 문제에 대한 국내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며, 개별 국가들의 다양한 국내 정치의 동학에 의해 국제정치의 과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다고 하는 것은 곧 이들 국가에서 개방경제의 혜택을 보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고 타국과의 경제적 교류에 따르는 이득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국가 간 교역과 투자의 증가로 나타나는 상호의존의 심화는 참여하는 국가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교류의 관계는 국제체도의 틀 속에서

창출되고 집행되는 규칙이 준수될 때 더욱 발전하게 된다. 즉 상호의존의 심화는 국가관계의 제도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다양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국내 경제 행위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한 국가의 경제 행위자와 다른 국가의 경제 행위자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가운데 지속, 발전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갈등이 첨예해지더라도 상호간의 교류의 단절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적 교류를 지속하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망이 국가 외교정책결정 과정에 투입되어 한 국가의 국제정치적 무대에서의 행위에 반영된다면, 국가들 간의 갈등이 급격하고 폭력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진다고 하겠다. 특히 국내 행위자들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타국가의 기업, 이익집단, 시민단체, 관료집단 등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부 수준이 아닌 민간 수준에서의 교류는 궁극적으로 정부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순화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이러한 일반론적인 논리를 더욱 발전시켜 최근에는 보다 정교한 이론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전통 내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이론의 예로는 무역기대이론(trade expectation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전쟁에 대한 효용기대이론(utility expectation theory)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현재 두 국가 간의 교역량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향후 양국간의 교역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양국 간의 전쟁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낮아지므로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현재의 교역량은 미미하더라도 향후 교역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이는 갈등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리라고 본다.<sup>13)</sup>

최근의 연구결과의 또 다른 예로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국가의 무역의존도(GDP 대비 교역의 규모)로 표시되는 교역의 양적 크기가 아니라 국가 간 교역의 속성 또

13) Dale C. Copel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A Theory of Trade Expect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1996, pp. 5-41.

는 양태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가 간 교역에 대한 정부의 통제 정도가 낮을 때, 즉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할 때 국가 간 갈등의 소지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교역에 대한 국가의 규제 장벽이 높을 때에는 그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국내 행위자들이 규제 장벽의 보호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려는 동기를 가지지만, 규제 장벽이 현저히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지키려는 국내행위자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행하는 국가들 사이에는 군사적 대립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sup>14)</sup>

아울러 설령 국가들 간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상호의존관계가 이미 깊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갈등 지속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는 연구도 있다. 교역 상대국끼리는 상호간의 전쟁이 수반하는 경제적 기회비용이 높은 만큼, 갈등의 당사국들은 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려는 동기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5)</sup>

마지막으로, 국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교역의 양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교역의 내용, 즉 주요 교역 품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 예에 따르면 무역의 증대는 전반적으로 갈등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수반하지만, 교역 대상 품목이 1차 산업의 생산품일 경우 무역의 갈등 감소 효과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2차 산업 생산품이 주요 교역 대상일 경우 무역의 갈등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 이유는 1차 산업의 생산품은 힘의 행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지만, 2차 산업의 생산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16)</sup>

이와 같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독립변수로서의 교역과 종속변수로서의 갈등/평화에 관련되는 보다 정교한 지수(indicator)를 발굴함으로써 '무역의 평화 효과'(pacifying effects of trade)를 입증하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 Patrick J. McDonald, "Peace through Trade or Free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4, 2004, pp. 547-572.

15) Valentin L. Krustev, "Interdependence and the Duration of Militarize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3, no. 3, 2006, pp. 243-260.

16) Han Dorussen, "Heterogeneous Trade Interests and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0, no. 1, 2006, pp. 87-107.

### III. 국제정치 이론과 미-중 관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이론적 시각에서는 미-중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상이한 견해를 피력한다. 우선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중간의 경제교류의 확대가 갖는 안보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양국 간 경제교류의 확대에 따른 상호의존의 심화는 취약성의 증가를 수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 취약성을 최소화하려는 각각의 노력으로 인해 양국 간에 갈등 관계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지금 당장은 미-중 간의 경제 교류가 양국의 안보관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경제는 내수 의존도가 높고 대외교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외교역의 비중이 낮아오는데다가, 미국의 대외 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양자 간의 경제 교류가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취약성이 급격히 커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어도 당분간은 양자 간의 경제교류가 양자 간의 힘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양자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수출 시장으로서, 저가(低價)의 소비재 공급원으로서, 미국 자본의 투자처로서, 아니면 에너지 확보의 경쟁대상자로서 그 비중이 확대된다면, 중국 경제의 향배에 따라 미국의 국가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확대된다면, 미국의 금융 및 재정정책 또는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중국 경제의 민감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이 경제적 취약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경제 정책과 시장 조건을 서로 자신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동기가 일방주의적으로 추구될 경우 상대방의 국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자신의 국가자율성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갈등관계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sup>17)</sup>

둘째,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한다.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중국으로 이전될 경우 중국은 이를 토대로 경제 발전과 군사력 증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 국가를 배양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중국이 획득한 자본과 기술은 결국 미국을 겨누는 비수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sup>18)</sup> 유럽의 주요 무기 수출국들이 중국에 대한 첨단 무기 수출을 위해 기존의 대중 무기 교역 제한 조치를 철회하려고 했을 때 미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침으로서 미-유럽 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중국의 대외교역 확대가 갖는 안보적 함의에 대한 미국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주의/구성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양국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동원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현저히 약화시킴으로써 탈냉전 이후 새롭게 제기되었던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경제의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 현대화'가 아직도 시급한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과 정치적 갈등을 빚음으로써 급선무인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개방 경제 정책의 보다 원활한 추구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해 가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이 WTO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19)</sup> 중국은 WTO를 비롯한 다자기구에 참여하고 있어 제도

17) 미국의 대 중국 경상 수지 적자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환율정책의 수정을 요구한 것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남주, "미국 대선 이후의 중미관계," 미래전략연구원 刊, *Hot Issue & Cool Vision* 2004. 11. 9.

18) 이러한 주장을 개진하는 사람으로는 William R. Hawkins를 들 수 있다. Hawkins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기술과 자본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거대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기술의 이전을 수반하는 수출 품목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William R. Hawkins, "Are We Serious about China?" *Washington Times*, Nov. 6, 2003, p. A21. Ted Galen Carpenter, *America's Coming War with China: A Collision Course over Taiwan* (New York: Palgrave, 2005), p. 3에서 재인용.

19) 1977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의 공식적 국제기구 멤버십은 21건에서 52건으로 증가하여

화된 틀 속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제기구 참여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제기구에의 참여를 통해 국제제도와 국제협력의 효용성을 인식하게 되는 한편, 다양한 국제기구의 제도적 환경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타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정체성, 그리고 국제체제의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궁극적으로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보다 협력 지향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중국발(發) 안보 위협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비록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방경제체제를 선호하는 세력의 영향력이 커짐으로 인해 모험주의적인 공격적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적 메카니즘을 통해 걸러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감한 개방 정책의 토대 위에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성취한 것이 이미 오랜 기간에 달하는 만큼, 개방 경제 체제의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작동을 원하는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중국 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엘리트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친(親) 시장세력인 이들의 영향력이 중국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의 외교정책 행태가 현 국제체제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중국이 국제체제의 수정주의 세력으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 국제제도의 수용, 국내정치 메카니즘의 작동 등으로 인해 갈등 유발적인 행태를 자제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가? 미-중간의 상호의존관계는 양국 간의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양국 간의 평화를 매개할 것인가? 과연 미국은 중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교류관계의 확대를 차단해야 할 것인가?

---

2배가 넘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비정부 국제기구 멤버십은 같은 기간 71건에서 116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2005, p. 14.



#### IV. 미국의 선택: '출구'(exit)와 '목소리'(voice)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와는 별도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 보건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전쟁과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시기와 조건에 따라 때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전쟁 억제에 기여하여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전쟁발발을 억제하고 평화로 귀결된 경우도 있다.<sup>20)</sup> 따라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소개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구성주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기와 장소,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다양한 비중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sup>21)</sup>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는 과연 양자 간의 관계가 어떤 상태이며, 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는 숨 가쁘게 성장일로로 달려 왔지만, 19세기 후반 이래 오랜 기간 동안의 침체와 고립으로 인해 아직도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따라잡기에는 갈 길이 먼 상태이며, 더욱이 경제발전의 혜택이 13억 인구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요원한 일이다. 물론 중국이 글로벌 패권국가나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국가의 지위로 발돋움하려는 욕구를 전

20)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전쟁 발발을 방지하였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역사적 사례로는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 이양을 들 수 있다. 오랜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대체로 패권의 이양은 패권전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나 19세기 패권 국가였던 영국이 20세기에 들어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는 과정은 양자 간의 전쟁이 생략된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했던 밀접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였다고 한다. 당시 미국과 영국 간의 교역이 차지했던 양국 경제에서의 비중은 이후 어느 시기보다도 컸었다는 것이다. Bruce Russett, "Violence and Disease: Trade as a Suppressor of Conflict When Suppressors Matter," in Edward D. Mansfield and Brian M. Pollins, ed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New Perspectives on an Enduring Debat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 185.

21)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2005, pp. 41-45.

혀 갖고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역할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타국가들의 의구심을 자아낼 필요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적 경제발전의 지속적 추구가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현존 국제체제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먼저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며, 따라서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이는 지금까지의 미-중 관계의 양상이 대체로 비일관적인 미국의 對 중국 정책에 대한 중국의 수동적이면서도 절제된 반응으로 구성되어 온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하겠다.<sup>23)</sup>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가? 미국이 만일 자유주의적/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대중(對中) 정책을 수립할 경우 클린턴 정부 중반 이후 추진되어 온 대중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의 기초가 유지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따라서 양자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도 심화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만일 현실주의적 노선을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한다면, 대 중국 정책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급격히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밝힌 대로 미국 경제의 대 중국 취약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 주장이 관철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과연 미국은 이처럼 현실주의적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현 단계에서는 적어도 미국이 그러한 정책을 채택할 가능

22) 현재 미-중 간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안은 대만문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Ted Galen Carpenter, *America's Coming War with China: A Collision Course over Taiwan* (New York: Palgrave, 2005), 대만문제에서만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면 중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수용하고 미국과 협조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Jia Qingguo, "Learning to Live with the Hegemon: Evolution of China's Policy toward the U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4, no. 44, 2005 참조. 대만문제 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인권문제, 이라크 침공 등을 들 수 있다. 이태환, "협력과 갈등의 미중관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합의," 세종연구소 정책보고서 2002-01; Peter Van Ness, China's Response to the Bush Doctrine," *World Policy Journal* vol. 21, Issue 4, Winter 2004/05; Zhou Qi, "Conflicts over Human Rights between China and the US," *Human Rights Quarterly* vol. 27, no. 1, 2005.

23) 박두복, "중국의 시각을 통해 본 미-중 관계 발전 추세와 한국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2005.

성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그러한 정책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축소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허시만(Aberto Hirshman)의 표현을 빌리자면, '출구'(exit)와 '목소리'(voice)가 그것이다.<sup>24)</sup> 여기에서 '출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기존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또는 단절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한편 '목소리'는 기존의 관계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미-중 경제 협력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적용시킬 경우 '출구'의 선택은 미국이 주도하여 양자 간의 경제 교류를 단절 또는 현저히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목소리'의 선택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지속 또는 확대시키되,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방침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국제정치이론의 두 가지 대별되는 관점과 각각 조응한다. '출구' 옵션은 현실주의적 사고를 반영하는 반면, '목소리' 옵션은 자유주의/구성주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중국과의 상호의존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양자 간의 경제적 교류를 단절 또는 축소시켜야 한다는 현실주의의 주장은 '출구' 옵션을 대변한다. 한편 중국의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국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안보에 득이 될 것이라고 보는 자유주의/구성주의적 처방은 '목소리' 옵션에 해당한다.

미국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옵션 중, '출구' 옵션의 채택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한다면 향후 미국 경제의 대 중국 취약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차피 내수경제의 규모가 다른 어느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현저히 큰 미국이 중국 경제에 대해 심각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계에 있어 '상대적 취약성'을

24) Albert O. Hirshman,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따지자면 중국이 훨씬 불리한 처지에 있다.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미국의 대중 의존도를 현저히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미-중 관계를 고려하건대, 취약성의 문제는 주요 쟁점이 아니다. 현실주의자들의 우려 가운데 기술 이전과 성장 동력의 제공과 이에 따른 힘의 관계의 변화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단절하는 '출구' 옵션을 선택한다면, 중국의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더 이상 군비 증강에 필요한 기술 획득이 불가능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고, 기술 이전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또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교역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그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현재 중국의 저가 상품이 수입됨으로써 억제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집권세력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그 정도의 경제적 대가는 지불할 용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설령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투자 자본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거대 시장,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다른 모든 국가들도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도록 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 있어서조차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미국이 단행했던 대소 곡물 금수 조치는 미국이 우방국으로 간주하던 국가들의 비협조로 인해 소련에 대한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국 농민들의 수입(income)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와 카터 대통령의 재집권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물며 아직 현재화되지도 않은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제 제재 조치에 다른 국가들을 동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가 미국의 주도로 단절되더라도, 미국이 남긴 공백은 서서히 다른 국가들에 의해 메워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을 막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경제적 대가만이 아닐 수 있다. 중국과의 상호의존 관계의 단절은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는 미국의 시도는 결국 중

국의 내부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외적 자극제의 역할을 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적대적인 경쟁자의 확실한 출현, 그리고 신냉전체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미국이 추구할 수 있는 보다 '사려 깊은'(prudent) 정책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지속하되, 중국이 국제안보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그러한 '유도'에 순순히 따르겠는가 하는 것이다.

## V. 결론: 미-중 관계의 전망과 한국 외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처방의 괴리는 근본적으로는 국제체제에서의 힘의 관계가 변화될 경우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힘의 분포에 있어서의 거대한 변화가 진행될 경우 전쟁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제체제의 안정성이 대규모의 무력 충돌 이후에야 복원되었던 경험도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어떠한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그러나 힘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는 힘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잘 관리하거나, 아니면 국제정치에 있어 힘이 갖는 의미에 대한 집합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두어져야 한다. 미-중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처방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겠다.

현 시점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현저한 힘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기 때문에, 글로벌 패권 국가로의 성장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라지도 않고 있음을

25)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에 입각해 힘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경제적 교류의 단절 이외에도 다른 처방이 있을 수 있다.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 그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도전 국가의 내부적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자체적 붕괴를 촉진하는 방법도 도전 국가의 등장에 따른 국제체제 내에서의 힘의 분포의 변화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9.11 이후 미국이 예방전쟁을 하나의 가능한 군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나 중국의 분열 또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미국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도, 중국으로서 미국이 그러한 방향으로의 사태전개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발전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중국이 아직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따름이며,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미국과의 힘의 격차를 극복하게 되면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또한 현재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봉쇄의 고삐를 늦추고 있지만, 중동문제가 호전되는 등 글로벌 수준에서의 문제들이 해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때는 다시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sup>26)</sup>

미-중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굴곡은 바로 이러한 상호 불신의 소산이다. 1990년대 이후 미-중 관계만 하더라도 미국정부는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중국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미-중 관계가 경색된 바 있으나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에는 대중 유화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초기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간주하는가 하면 미군 정찰기의 해남도 불시착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양국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처했으나 9.11 테러 사건 이후 다시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이른바 '틈새시장 외교'의 의도와 중국의 비확산 협력 의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으로 인해 다시 관계가 소원해지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자 관계는 긴장의 고조와 완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양자 간의 관계는 지속적인 전략적 상호 불신 속에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sup>27)</sup>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록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주의적 처방을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추구하기는 어려운 형편

26) Peter Hays Gries, "China Eyes the Hegemon," *Orbis*, vol. 49, Issue 3, Summer 2005, p. 403.

27) 미중 양국은 근본적으로 상호 불신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로는 김성한, "미중 정상회담 평가 및 미중 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월간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 5. 10 참조.

이지만, 현실주의적 처방의 배경이 되는 현실 인식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직도 국제체제 자체 및 국제체제에 대한 인식의 세계가 현실주의의 영역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중 관계는 당분간 '자유주의/구성주의적 기대'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가겠지만, '현실주의적 세계관의 현실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목소리' 옵션의 사용을 통해 미중 간의 잠재적 갈등 문제에 대처하겠지만, '출구' 옵션을 카드로 사용할 여지를 배제하지는 않는 양상으로 미-중 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미-중 관계가 현실주의적 인식의 요소를 계속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주의/구성주의적 틀 속에서 전개되어 나간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미-중 관계의 미래는 한국 외교정책의 향방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글로벌 수준에서는 물론이요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국은 지난 50년 이상 한국에 대해 안보 우산을 제공해준 군사동맹이고, 경제적으로도 양자관계 및 다자기구의 틀 속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이며, 중국은 우리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눈부신 경제발전에 힘입어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는가 하면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계의 여하에 따라 우리의 국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의 전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관계의 미래가 한국 외교에 대해 갖는 함의를 가늠함에 있어, 국내에서는 탈냉전, 금융 위기, 중국의 부상, 테러 전쟁 등을 겪는 가운데 많은 논의들이 현재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형편이다. 오랜 기간 혈맹관계를 맺어온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중요성, 문화적 공통성, 그리고 역사적 관련성 등을 이유로 중국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논의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극단적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친소관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만큼은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인가?

만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고, 어떠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자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카드를 가지고 가장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5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구축해온 안보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어려운 선택인 동시에,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선택은 비싼 대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한국으로서는 최대의 외교적 위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 해야 할 선택은 미국이나 중국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양국이 모두 한국에게는 중요한 나라들이고,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간에는 상황과 사안에 따라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인 적대관계로 악화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상호간에는 분명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불신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중 양국은 상호간의 갈등이 위기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 진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자 간의 갈등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될 경우 양자 관계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어느 쪽도 원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인식에서이다. 미-중 관계가 적대관계가 아닌 이상, 한국이 해야 할 선택은 양국과의 우호 관계를 모두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가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이들 두 국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들 두 국가의 대내외 정책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국력의 규모로 보건대, 이들 두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결적 외교정책을 구사해서는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들과



정부, 민간 차원을 망라하여 다차원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의사를 이들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등을 돌린 한국도, 중국을 버린 한국도 반가운 존재가 아닐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저버린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한국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동적 환경 속에서 큰 효용가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과 소원한 관계에 있다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행사는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미국이 중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한국이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에서, 또는 동아시아의 다자간 협력체제의 일원으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미국 또한 동아시아 정책 수행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같은 논리로, 중국 또한 미국과 갈라선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미국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더욱 용이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대미 관계에서의 외교적 자본(diplomatic capital)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논문투고일: 2006. 11. 06)

(심사의뢰일: 2006. 11. 10)

(게재확정일: 2006. 12. 02)